

전라도 천년 기념 '맞손'

도, 광주·전남 등 시도와
국립전주박물관 등과
역사 문화 전시·학술 협력

전북도는 지난 1일,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다양한 전시 및 학술 대회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2018년은 고려 현종 9년(1018년) 전주 일대의 강남도와 나주 일대의 해양도를 합쳐 전라도라고 명명한 지 천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라도 3개 시·도는 전라도 천년사 편찬,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전라감영 복

원,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등 30여개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역시 전라도 천년 기념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여 전라도를 일구고 가꾼 다양한 계층의 역사인물들을 중심으로 전라도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전라도 정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특별전 '전라도 천년을 지켜온 사람들, 약무호남시무국가와 함께 전라도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학술대회를 호남권 대표 역사학자인 전북사학회·호남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고려의 보물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전라도지역의 청자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었는

를 밝히는 특별전 '고려청자의 정점을 만나다-부안청자·강진청자를 개최한다. 아울러, 국립나주박물관은 전라도에 접하는 국보와 보물 등 문화적 명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조명하는 '전라 명품전'을 개최한다. 국립박물관 전시 담당자는 "전시에서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면서 "앞으로 호남권 3개 시도와 함께할 수 있어, 보다 충실한 전시와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노학기 문화유산과장은 "지자체와 국립박물관간 상호협력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의 내실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진성 기자



“장애인 정책 실천에 노력할 후보자를 지지한다” 전북도내 20개 장애인단체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6.13 선거에 각 당 및 후보자의 장애인 공약, 장애인 단체를 위한 예산확보, 장애인종합회관 신축, 장애인 입후보자 선정 등 장애인 정책 및 실천에 노력할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전주시장 예비후보 동향

“새정부와 교육자치 새시대 열겠다”

김승환 교육감 예비후보

김승환 예비후보가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승환 예비후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교육자치 강화로 각 시·도교육청은 물론 단위학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새정부 교육정책 마련에 전북교육청이 보조를



맞춰줬던 만큼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김승환”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현안과 교육 분야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승환 예비후보는 “전북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9월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TF팀을 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사업을 전수 조사하는 등 이양사무 선정 및 이양 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이는 이양받는 주체, 즉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양 대상 사무를 검토·선정하는 실질적인 이양 방식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승환 예비후보는 “시·도교육청에서 단위 학교로의 권한 배분도 차질없이 진행해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자치를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특히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주체가 돼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학교협동조합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참여형 정책숙의제 시행,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학교자치조례 제정 재추진 등 학교자치 기반을 탄탄히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독립영화의 산실로”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창작과 표현의 해방구인 전주국제영화제를 ‘제2의 노무현입니다’와 같은 독립영화·대안영화의 산실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일 제19회 전주국



제영화제를 하루 앞두고 “영화의 본질은 영화를 만드는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에 있다”고 영화제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 뒤 “앞으로도 ‘영화 표현의 해방구’로서, 그 어떤 자본과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지만 관객과 영화인들에게는 겸손한 영화제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승호 MBC 사장이 뉴스타파 제작 시절 연출한 ‘자백’과 다큐멘터리 영화 중 최단기간 100만명 관객을 돌파한 ‘노무현입니다’의 단단한 울타리 역할을 했던 김 예비후보는 “영

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전주국제영화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영화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거듭 밝히며 “향후에 제2의 자백, 노무현입니다 등 표현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영화를 제작하고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대안영화·독립영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주국제영화제의 방향을 거듭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재선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중심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로 만들고, 더 나아가 전주를 세계적인 영화 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국회, 정쟁·직무유기 ‘개헌 동시투표’ 무산”

靑, ‘정부 개헌 꼭 실현’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 “지선 동시개헌 무산 송구… 개헌안 취지 살리고자 노력”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개헌 공약을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은 지난 3월13일 시작돼 청원시작 9일만인 3월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정부부처 장관급의 답변 총족요건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이끌어냈다.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자로 나선 진 비서관은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국민 모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답변 총족요건을 넘어서는 성과를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왔다”면서 “그러나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고 책임을 화살을 국회로 돌렸다. 그러면서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지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양용모·국주영은 도의원 “예비군대대 이전 민주적 절차 거처야”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의장과 국주영 의원은 2일 국방부를 방문해 전주광역예비군대대 이전시 주민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의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유동준 시설기획과장 등 관계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전주시 조촌동 일대에 전주항공대대를 이전한 데 이어 예비군훈련장까지 옮기려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전주시 송천1동 주민들의 불편과 전주시 도시계획의 설계를 위해서는 조속히 이전해야 하는 부분은 동의한다”며 “그러나 군부대 이전은 일

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군사 기밀 외에 공개하고 토론과 협의절차를 거치는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비군훈련장을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등 통합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와 인센티브 등을 통한 주민합의와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전주시에서 이전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항공대대에 이어 예비군대대까지 이전하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며 “전주시에서 주민 50% 이상 찬성한다고 국방부에 제출했다

는데 사실이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동준 국방부 시설기획과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전주 예비군대대 이전은 이전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전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 부지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부대 이전시 병영 및 훈련시설 등 이전부지의 3/1정도만 보안구역이고 나머지는 부대 내 공원이나 연병장, 체육시설 등은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예비군훈련장은 일실로 이전한 35사단 예하 예비군 교육대대로 현재 전주시 송천동 예코시티 맞은편에 있으며 면적은 32만5000㎡에 달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